

OECD-KRIHS-MLTM 협력을 위한 해외출장 복명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제27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에 참석하여 정책과 지역의 실행, 혁신주도 지역개발, 지역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불평 등을 주제로 주제발표 및 토론 등 진행
 - 제23차 지역개발지표작업반(TI) 회의에 참여하여 2012~2014 지역개발지표 작업반 활동 및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정책 강화를 위한 복지측정” 워크샵에 참석하여 주요국의 정책동향 파악 및 적용방안 모색
 - Compact City 정책 회의에 참석하여 ‘컴팩시티 정책보고서’ 발간행사 및 컴팩시티 국제워크샵을 통해 최근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컴팩시티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의 컴팩시티 정책 동향을 소개(세미나 발표 및 토론, 정책자료 작성 및 회의결과 정리)
 - OECD와 압축적 공간구조 분석 및 컴팩시티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Urban Modelling 연구추진을 위한 OECD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향후 OECD-KRIHS의 구체적 연구협력 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10(일) ~ 6월 17일(일), 6박 8일
 -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 출장자
 - 김대중 연구위원, 정윤희 책임연구위원

2. 출장일정 및 세부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6.10(일)	인천	파리		도착 및 이동
6.11(월)			OECD 회의장	지역개발지표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회의 참석
6.12(화)			OECD 회의장	TDPC 작업반 회의 참석
6.13(수)			OECD 회의장	TDPC 회의, Compact City 정책회의참석 및 발표
6.14(목)			OECD 회의장	Compact City 정책회의참석 및 발표
6.15(금)			OECD 회의장	OECD-KRIHS Compact City Urban modelling 연구 협력 관련 회의
6.16(토)	파리			출발
6.17(일)		인천		도착

3. OECD 지역개발지표작업반(TI) 제 23차 회의 (6.11)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회의 개요

- a) 세션 1: 삶의 질과 지역 및 대도시 지역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Quality of life and access to services in regions and areas)
- b) 세션 2: 물질적 조건들
(Material conditions)
- c) 세션 3: 복지의 다른 측면들 측정
(Measuring different dimensions of well-being)
- d) 세션 4: 미래 활동을 위한 현황 파악
(Stocktaking for future activities)

□ 주요 참석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OECD 회원국 대표 및

OECD 사무국 담당자 등 74명

- 한국: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하동수 과장, 수도권정책과 정승수 사무관, 국토연구원 김대중 연구원, 정은희 연구원, 당대표부 이안호 일등서기관 등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제22차 회의에 이어 도시 및 지역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지표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 진행
- OECD는 그간 GDP 등과 같이 경제적 지표에 한정된 평가체계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부응하여 주관적 성격의 요소를 지표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
 - 특히, 국가차원의 지표들이 많고 대체로 GDP 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에 한정된 현재의 평가체계에서, 지역단위의 지표수집체계 마련 방안, 국가간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지표체계 통일, 삶의 질, 불평등 등 다소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합리적 평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
- 사례로 영국의 지역 결핍지표, EU의 물질적 결핍지수, 덴마크의 좋은 인생 지표 등을 제시

⇒ 상세내용

1. 지역 및 대도시권의 삶의 질과 서비스 접근성 (세션 1)

- ①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삶의 질 측정 (EC-DG의 Lewis Dijkstra)
 - 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로는 도시 및 지역 차원의 접근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차원의 분석 수단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
 - EU는 “지역, 지역 유형, 도시화 정도” 등 공간적 측면에서 지역발전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인식지표로 구분이 필요하고, 개인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인식지표는 객관적 지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
- *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차가 없는 상황인 경우, 원하지 않는 경우와 원하지 않지 못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함
- ② 복지 지표를 통한 지방행정 수준 평가 (멕시코 INEGI의 Norberto Roque)
 - 지리적 정보와 복지지표를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행정수준 평가 방법 소개
 - 차량 도난 집중 지역 탐색, 커피 경작지역 중 바나나 경작에 적합한 지역 탐색 등 지역정부가 적합한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분석 모델링을 통해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따른 빈곤률 감소효과, 공공재정 지출을 위한 정보제공 효과(교육, 경제, 농촌지역 등)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 가능
 - 이 모델은 도시계획, 토지이용 등 다양한 부문에 사용 가능하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표 체계와 지방정부차원 데이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일본) 일본도 복지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3가지 부문(경제상황, 주거상황, 사회적 상황)으로 구성된 지표 구축을 추진중임
 - (그리스)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해 국가가 아닌 지역 차원의 지표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원활한 활용체계 마련은 쉽지 않지만, 점차 발전하고 있음

2. 물질적 상황 (세션 2)

- ① 영국의 지역 결핍지표: 다층적 결핍현황에 대한 소(小)지역 단위의 공간적 분포 분석과 지역기반 재생정책의 활용 (영국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의 David McLennan)
 - 2000년 최초로 도입된 영국의 결핍지수의 내용과 다층적인 낙후 지수를 보다 작은 규모인 근린 단위에서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
 - 영국의 결핍지수는 취약한 지역을 규정하고 관련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 개발
 - 결핍지수는 지역의 결핍 현황 파악 및 근린재생기금, 근린 직업기금의 지원 결정 등 빈곤·결핍·복지와 관련된 정책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 가능
 -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빈곤 퇴치를 위해 유사한 지수체계 도입을 추진중임
- ② 유럽국가들의 물질적 결핍 측정 개선 현황
 - 27개 EU국가들과 유럽경제공동체는 사회적 부문에서 EU의 협력을 위해 2009년 물질적 결핍 지수(Material deprivation measurement)를 채택
 - 2010년 6월 EU지도자들은 최소 2천만명 이상의 빈곤인구를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협에서 구하고자, “2020 유럽 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마련
 - 물질적 결핍지수는 유럽전략의 마련 및 추진에 근거로 활용되며, 2009년 EU-SILC”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지표에도 반영
 - 물질적 결핍 지수가 국가 및 EU 수준에서 사회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분석 틀, 지표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발표자는 보완된 분석틀과 이를 이용한 분석결과 소개)
 - (EU) 각 국가 및 EU차원에서 데이터 구축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며 “EU-SILC”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

- ③ 물질적 조건과 불평등에 관한 OECD의 대응 : 지역차원으로 확장 가능한 영역은? (OECD Marco Mira D’Ercole)
 - 물질적 상황, 삶의 질, 사회적 격차 등의 주제에 대한 OECD 사무국의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지역차원에서 확장이 가능한 향후 연구 방안을 설명
 - 가구소득은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가구의 물질적 상황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임. 여러 OECD국가들의 가구소득 분배에 대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국가 하위 단위(지역)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소개
 - 더불어, 지표 체계 개선, 데이터 수집 범위 확장을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 과제들을 설명
 - TL1, TL2, TL3 차원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각 국가간 컨택 포인트로부터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있음
 - 소득 기반 지표를 넘어 다층적 결핍 등 물질적 상황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들까지 포괄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
 - (영국) 물질적 결핍, 삶의 질 등 관련 지표를 보다 작은 지역단위에 근거토록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고, 지표들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좀더 용이하게 할 필요
 - (EU)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의 중요하며, 물질적 결핍, 삶의 질 등의 지역간 비교시에는 지역간 생활비용(Cost of living)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
 - (그리스) 다차원적인 결핍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언급된 7개 부문의 지표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 중복의 소지 및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으며 개선

이 필요. 또한 EU차원에서 결핍의 종류·수준 등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3. 복지의 다차원적 측정 (세션 3)

- ① 복지에 대한 지역적 차이 (Paris School of Economics의 Claudia Senik)
 -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개인의 이동성, 개인적 선호의 동질성, 어메니티 등을 고려한 보완 지수를 소개
 - 지방정부는 복지평가를 위해 지역의 공공재, 거버넌스 수준, 지역의 사회적 자본, 범죄율, 어메니티 등의 평가가 필요 (아래의 세가지 방법을 소개)
 - (Hedonic prices 방법) 지역의 어메니티와 외부효과가 주택가격 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나, 시장의 불완전성을 고려하기 힘들고 합리적 가정 및 인식에 대한 한계. 더불어 깨끗한 공기 등과 같은 지역 어메니티의 효과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
 - (선호 조사) 사람들의 선호를 질문·응답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전략적 행동, 예산 제약 등에 대한 고려 부족, 대체제 간의 상충 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단점
 - (삶의 만족도 조사) 행복에 대한 주관적 질문에 응답·작성하는 방식으로 어메니티의 주관적 선호에 대한 평가 및 개인의 행복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방안 제시
 - 삶의 만족도 조사는 시장의 불완전성, 응답자의 전략적 응답 등 다른 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
- ②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표: 지역발전목표 달성의 수단 (미국 HUD의 Ana Marie Argilagos)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HUD-DOT-EPA 협력을 소개

- 비효율적인 기반시설은 비용 소모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초래. 토지이용과 교통을 연계하는 것은 생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민간 투자를 가능케함
- 커뮤니티의 생활 비용 감소를 위해 다양한 교통대안, 지불가능한 주택 에너지 비용 등 살기좋은 도시의 7가지 'Livability Principles'을 제시
- 살기 좋은 커뮤니티의 7가지 원칙을 지표로 평가하는 적용 사례 소개
- ③ 남부 덴마크의 좋은 인생 지표: 개인과 사회경제적 지표의 통합 (남부 덴마크 지자체의 Rune Stig Mortensen)
 - 좋은 삶(The Good Life)은 덴마크 남부지역의 지역개발 비전으로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인 행복 및 보다 나은 인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이자 정책
 - 계획은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전략으로 구성되며, GDP나 생산성과 같은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진보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왔음
 - 지수는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를 표현한 피라미드에서 고안.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갈수록 좋은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동력을 표현
 - 각 부문의 하위지표는 개인 상황 인식에 관한 지표 5개, 사회경제적 지표 5개, 자기 성취는 개인지표로만 구성되며, 그 외 20개의 사회경제적 지표는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됨
 - 측정결과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개인지표의 수준도 낮지는 않으며, 오히려 평균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좋은 인생의 서로 다른 면을 지표 안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덴마크에서는 좋은 인생 지표가 많은 정책결정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음. 지표는 지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정책의 근거를 제공

4.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제 27차 회의 (6.12~6.13)의 주요내용

□ 회의개요

- a) 세션 1: 정책과 지역의 실행
(Policies and regional performance: empirical-based evidence)
- b) 세션 2: 혁신 주도 지역 개발
(Innovation-driven regional development: insights from recent regional reviews)
- c) 세션 3: 지역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Social Inequalities at the regional level)

□ 참석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OECD 회원국 대표 및 OECD 사무국 담당자 등 117명
- 한국: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하동수 과장, 수도권정책과 정승수 사무관, 국토연구원 김대중 연구원, 정윤희 연구원, 당대표부 이안호 일등서기관 등

□ 주요내용

1. 기조 발언

- 의장 :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경제위기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에 대응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및 삶의 질을 확보하는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정책 대해 논의하고자 함
- Ms. Zhanar Aitzhanova(카자흐스탄 경제부)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있어 OECD와의 협력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중소기업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함. 향후 카자흐스탄 2020 계획에는 구체적인 복지 개선, 기반시설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성장을 추진할 계획
- Rintaro Tamaki(부사무총장) : 향후 지역발전정책 수립 및 달성에 있어, 행태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리적인 빈곤, 지구차원의 경제침체 등에 주목하여야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경험의 공유, 다차원·다부문적인 접근, 일관된 정책, 장소기반정책 등이 필요

- 회원국 : 혁신, 규모의 경제,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중요 또한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무계획적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OECD국가의 도시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 한편,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으로 인해 농촌지역에서는 혁신을 일으킬 만한 주체가 없으므로, 자원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그 외, 동반성장의 중요성과 혁신(기술 및 비기술)의 필요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자료 접근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2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정책: 정책과 지역개발 성과의 증거 (세션 1)

① 사무국

- 이번 세션의 목적은 지역성장의 요소, 공공투자를 위한 다자적인 거버넌스 및 정책과 성과의 관계 등에 대한 OECD의 1차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특히 지역성장 요인이 다양한 개발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한 것
- 또한 정책 일관성 확보와 보완 수단의 강구, 경제전반에 걸친 정책이 지역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부의 수준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

② 지역성장을 유발하는 요인 (사무국)

-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spatially blind) 정책은 당면한 지역문제에 해결에 한계를 보이므로 지역기반(placed-based) 정책 수립·추진이 필요
-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은 민간부문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함. 더불어 정부의 수준(quality of government)이 높아야 하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부라야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 분석결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은 지역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나, 대체로 기술력, 기반시설, 비경쟁적 규제(anti-competitive regulation), 더 나은 거버넌스, 교육 등이 중요한 요인
- ③ EU에서 기반시설과 지역성장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Andres Rodriguez-Pose 교수)
 -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개발정책에 있어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
 - 하지만, 인프라 유지관리비용 증대, 지역간 연계 등으로 인한 대기업의 유출,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중소기업 붕괴 등으로 인해 지역 양극화 현상, 일부지역 집중 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때,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역성장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잠재성 그리고 다른 정책들과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인프라투자를 고려해야함
 - 또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너무 빨리 진행되거나, 너무 늦어지게 되면 효과를 제대로 얻기 힘들
 - 결론적으로 투자 지역과 시점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때 접근성이 극대화되고 침체된 지역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임
- ④ 유럽의 지역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측정 (로마 La Sapienza 대학의 Guido Pellegrini 교수)
 - 지역정책이 실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여러 연구가 있지만 자료 정확성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와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
 - 유럽의 '95년~'06년간 지역투자 및 지역성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개발정책이 연간 0.6~0.9%p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나며, 분석대상 기간 11년간 총 7~10%p의 경제성장 유발

- ⑤ 토론
 - 지역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구성장, 시장 접근성 등의 요소들이 무척 중요하며, 최근들어 디지털산업 투자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
 - 독일은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투자로 지역성장을 이끌어내는 독일 동부의 사례를 설명하고,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
 - 침체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인구가 유출되고, 민간부문의 투자도 활성화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인프라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
 - 도로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적자원 등 인프라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용어보다는 공정성(fairness)이란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음

3. 혁신주도 지역개발 : 최근 지역정책 검토로 얻은 통찰 (세션 2)

- ① 사무국
 - 유럽, 미국 등을 지역별로 지식허브(knowledge hub), 산업생산지역(industrial production zones), 과학기술 무기반지역(non-S&T driven regions)으로 분류하고,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의 지역현황과 혁신을 통한 발전방안 분석
 - 덴마크의 경우 높은 경제력과 삶의 질을 누리는 선도지역이 없으며, 지역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위기
 - 서부 해안 농촌지역의 경우 노동력 및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중부지역의 경우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Aarhus가 숙련된 노동자와 R&D 투자에 기반하여 성장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함. 남부의 경우 분산된 인구분포 양상을 보이는 등 지역적 이산현상이 두드러짐
 - 덴마크는 국가-지역간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마련, 농촌지역의 성장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등의 적절한 공급, 과학기술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을 통한 혁신 유도,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공급 등이 필요

- 최근 모범 사례로는 중부지역의 풍력에너지 발전 성공사례, 남부지역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Welfare Technology 등이 있음
- 벨기에 wallonia의 경우 전통산업이 강한 지역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이 필요
 -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의 수준은 상당히 높으나, R&D 관련 기관 등이 일부 지역에 편중 분포된 경향
 - 따라서, R&D와 혁신을 위한 예산 및 기관의 지역배분 고려, 혁신을 넓고 깊게 가져가기 위한 정책마련. 혁신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체계 개편, 혁신 창출을 위한 종합정책 및 추진수단 마련 등이 필요
 - 최근 모범 사례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Plan Marshall, Creative Wallonia 계획이 있음
- 스웨덴의 Skane의 경우 총생산 규모는 크나 인당 생산성은 낮은 편이고, 인적자본이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추세. R&D 전문성이 강하나 지역성장 및 고용창출과의 연계는 제한적인 상황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혁신정책의 마련 및 추진, 지역간·민간부문간의 연계, 교육·R&D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면서 혁신적인 기업 저변 확대. 이주민에 대한 통합정책 마련. 숙련고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 주거기반,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장된 연계성 등에 초점을 맞춰 주거와 노동환경을 매력적으로 가꿔나갈 필요
 - 최근 모범 사례로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지역 혁신 전략으로서 Cross-cluster and cross-border 정책
- 이러한 지역혁신 전략의 추진에 있어 고민해야할 중요한 물음들이 있음
 - 첫 번째, 지역 혁신을 위해 특정분야 육성정책 추진시 그 외 타분야의 발전 가능성들과의 조화방안은?
 - 대개 지자체들은 혁신정책의 분야가 비슷한 경향이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그

러한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클러스터 맵핑(cluster mapping) 등의 기법으로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의 논의 및 우선순위 선정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향식 정책결정 방식이 요구됨

- 미국의 산업클러스터 지도화(mapping) 시스템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등록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 www.clustermapping.us
- 지역의 발전적인 특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부문(산업)만을 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스마트한 특화전략 구사 필요
- 두 번째, 통합적인 지역혁신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기법은?
 - 정책을 마련·집행하는 부처의 경우 정책의 분야와 성격이 다양하나, OECD 사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합하여 단일 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여러 기관이 협력적 정책 추진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임
 - 출발점은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집합적인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이 중요함
 - 기술적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 사이의 균형과 더불어 ICT 등 다부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혁신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야 함
- 세 번째, 사회적 현안사항, 포괄적 성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정책 방향은?
 -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성, CO2 감소 등시장여건 변화와 건강,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고려
 - 포괄적 성장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세션3에서 본격 논의)
- ② 토론
- 타지역의 혁신경험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호 운영공유 시스템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 투자와 성과 사이에 명확한 연결/관계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접근방법(performance-based approach)에 대한 고민 필요
- 인프라 투자의 지역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해당 성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필요. 인프라 자체만으로는 지역혁신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적자원도 넓은 의미의 인프라에 포함시켜 고려할 필요
- 혁신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인지할 필요

4. 사회적 불평등 개선 및 포괄적 성장 도모를 위한 지역정책의 역할 (세션 3)

① 포괄적 성장 촉진 (Luiz de Mello, 사무국)

- OECD inclusive growth agenda 발표
-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괄적 성장모델을 적용하여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
- OECD 국가의 경우 지난 30년간 상위 10% 계층 소득이 하위 10% 계층 소득의 9배까지 증가하는 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개도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의 실업율이 증가하는 상황.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낮은 정규직 고용이 중요한 이슈
- 삶의 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성장속도가 빠른 국가에서도 예외는 아님
- 사회적 불평등, 삶의 질 등의 과제에 대처함에 있어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OECD의 "promoting inclusive growth"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정책 전략에 대하여 고찰

- 포괄적 성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논의를 통해 혁신, 기업가정신, 그린에너지 등의 촉진, 포괄적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및 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할 시기임

② 왜 불평등이 심화되는가 (Mr. Scarpetta)

- OECD "Divided we stand" 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
- 이 보고서는 "Growing Unequal" 보고서('08)의 후속으로 경제위기 기간중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 근로 연령층(working age)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 임금격차와 수입격차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연구
- OECD 국가들의 경우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
 - 소득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임금 격차는 슬로베니아, 덴마크 등은 1:6 수준, 한국, 캐나다 등은 1:9, 멕시코, 칠레는 1:27에 이름
 - 소득 상위계층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계층 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불평등 심화가 큼
 - 경기 침체·호황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심화되는 양상
-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은 기술발전, 세계화에 대응한 정책변화, 인적자본, 비정규직·파트타임 직장 등 근로환경 변화, 고소득 직종과 저소득직종간의 근로 시간 분화, 가족구성 변화 등 다양함
-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통한 소득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기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됨
 - 그 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를 충분히 상쇄할만큼 효과가 크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적용분야 외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

- 주요 시사점은 정부의 소득이전 정책은 저소득층 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접근성 개선, 고소득 계층으로부터의 세수증가 여력을 고려한 세제 개편, 양질의 고용증가, 직업훈련 등을 추진할 필요

③ 불평등 개선과 지역성장의 조화는 가능한가 (Ms. Isabelle)

- OECD 보고서 “going for growth, on reducing income inequality while boosting economic growth”의 일부 내용 발표
- 통계분석을 통해 성장과 불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교육, 고등교육, 이민자 통합정책, 여성고용촉진, 차별금지, 최소임금규정 등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들의 고용율, 소득격차 완화, 1인당 GDP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 교육, 이민자 통합정책 등은 성장과 불평등 완화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뚜렷하나, 여성고용촉진 정책 등은 지역에 따라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으며, 차별금지, 최소임금 규정 등은 불평등은 개선하나 성장은 다소 약화되는 경향

④ WPTI 워크숍의 성과 (WPTI 의장 Mr. Rodrigues)

- WPTI 워크숍 “지역발전정책 강화를 위한 복지(well-being) 측정”의 성과 보고
- 지역 수준(regional level)에서 복지의 개발 및 측정방안, 지역정책 연계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
- 특히 주관성이 높은 지표, 지역차가 크고 시간에 따른 상대적 변동이 심하여 일관된 측정이 어려운 지표 등에 대해 측정 기준 및 적용가이드 설정 등이 필요
- David McLennan(Eng), Norberto roque(Mexico), Rune Stig Mortensen(Denmark), Ana Marie Argilagod(USA), Marco Mira(OECD) 등 다양한 연구 사례들을 제시

⑤ 토론

- 한국 대표(하동수 과장) 및 일부국가들은 지역간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역적 문제와 소득세 등 국가전반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간의 관계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함을 제시
- 이에 OECD 측에서는 고용, 소득 등은 국가정책으로서 국가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치나, 인구 이동성(mobility), 지역현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주시
- 다만, 연구초기인 만큼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으며, 향후 구체적 연구방향, 각종 지표 및 정책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체계설정이 필요함



5. OECD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컨퍼런스 (6.13~6.14)의 주요내용

□ 회의개요

- a) 세션 1: 정책 전략과 거버넌스 도전들
(Policy strategies and governance challenges)
- b) 세션 2: 도시화된 세계에서 콤팩트 시티
(Compact cities in the urbanising world: - How can the compact city concept be applied)

□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보고서 주요내용 소개

- 도시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70%, OECD 국가 인구의 86%가 도시지역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효율적 토지자원 이용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34개 OECD 국가 중 30개국에서 건축물 건설 등을 위한 토지 소비가 향후에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도 지속되는 상황. 예를 들어 OECD 국가에서 노인인구는 지난 60여년간 두배로 증가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세배 증가. 도시정책은 이러한 인구구성 변화에 대응한 변화 필요
 -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도시차원의 새로운 정책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기반시설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여력이 감소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되는 상황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콤팩트 시티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
 - 콤팩트 시티는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계한 고밀도 개발 유형으로서 지역 공공서비스 및 고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콤팩트 시티는 도시 내의 지역간 거리를 줄이고 차량교통 의존도를 감소시켜 환경적 부담을 완화. 더불어 기반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민들에게 공공서

비스, 고용,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줌

- 보고서에서는 압축성(compactness)을 대표하는 밀도, 근접성, 대중교통 시스템, 공공서비스 및 고용에 대한 접근성 등의 지표와 도시간 비교를 위한 콤팩트 시티 성과지표를 사용
- 보고서는 5개 지역의 사례를 통해 정책의 차이를 검증하고 지역현황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예를 들어 개발압력이 높은 급성장 지역의 경우 도시의 무계획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중요
- 콤팩트 시티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 도시 주변부의 연속적인 개발, 기존 건조지역의 재개발, 도심의 다양성과 삶의 질 증진, 부작용의 최소화 등이 필요

2. Open debate #1

- ① 콤팩트 시티 전략을 통한 토야마시의 특별한 도시관리 (일본 토야마 시장 Masashi Mori)
 - 토야마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선, 매력적이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과 주요 교통 결절점을 따라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로 이주토록하여 많은 고용과 세수를 창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관련 용도의 시설을 도시내 교통라인에 집중 육성하고, LRT, Tram, 버스 및 택시 교통 서비스 개선,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케어센터 및 노인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등이 있음
 - LRT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승객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운영서비스를 개선하고 IC 승차권 도입, 열차 디자인 개선, 진동 감소, 무장애 디자인 적용 등의 정책 추진.
 - 결과적으로 주중기준으로 이용자가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고령자들의 LRT 이용이 늘어남. 또한 증가한 이용자의 12%는 과거 자가용을 이용하던 사람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소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Tram의 경우, 도심내 기존 도로를 따라 환상형의 선로를 만들고 매력적인 도시 형성을 위한 디자인 도입 등을 통해 승객이 이전에 비해 약 10% 증가
- 도심지역내 자전거 임대 서비스를 도입. 도심 15개 전철역에 150개의 자전거를 설치 운영. 현재 1,532명이 가입하여 이용중이며 전체 사용량은 7천3백여회에 이룸. 이를 통해 CO2 배출감소, 도심 활성화 등에 기여

② 멕시코의 콤팩트 시티 전략 (멕시코 도시 및 토지 개발부의 Sara Topelson)

- 멕시코 국민의 71.6%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향후 도시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여기서는 도시 확장 예측과 대안에 대해 검토
- Calgary시는 1951년 4,000 ha에 불과했으나 2005년 47,100 ha까지 도시가 확장되었으며, 현재의 개발패턴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1,000 ha까지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콤팩트한 도시개발을 유도할 경우 76,000 ha 정도로도 충분히 그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도로건설,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비용이 33% 감소되고, 도시 운영비용도 1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6월 G20 정상회담 개최예정인 멕시코 남부의 Los Cabos시의 경우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 추진중임

④ 한국 콤팩트 시티 정책현황과 전망 (한국 국토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 한국의 경우 대도시권의 인구증가를 둔화 및 고령화로 인해 도시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가중되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로 도시공간의 재편 필요성 증대
- 한국 콤팩트 시티 정책 방향은 도시의 지나친 외연 확산, 불균형 심화, 도심쇠퇴

및 공동화 등 성장시대의 도시문제에 대응한 도시재생의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수단 확보 등

- 성장도시의 경우 선별적 고밀개발, 기존 도심내 미이용 지역 우선개발, 역세권 중심의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 토지이용, 직주근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지향
- 구체적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성장도시, 구도심, 광역도시권 등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을 추구하며, 화성, 동탄 등 신도시 개발시 콤팩트 시티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 구도심 재생시에는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역세권 개발법 등에 근거하여 고밀의 복합·입체적 개발 추진
- 향후 한국형 콤팩트 시티 개념을 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며, 도시권 단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콤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할 계획



⑤ 콤팩트 시티를 향하여 (일본 국토교통성 자문위원 Takeshi ABE)

-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도시화가 매우 급속도로 진행중인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인구 감소 경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남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에 있어서도 콤팩트 시티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 일본의 Iwanuma시의 경우 파괴된 377개 주택을 인근의 기개발지역으로 재배치
- 밀도는 콤팩트 시티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통계적 기법을 통한 밀도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함. 예를 들어 파리의 경우 상당히 고밀도임에는 틀림없으나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녹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유지할 필요
- 콤팩트 시티는 도시민의 삶의 질, 인구 변화, 기후 변화, 세계화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3. Open debate #2

- ① 콤팩트한 도시계획: 개발도상국 도시 전망 (World Bank의 Hiroaki Suzuki)
 - 전세계에는 백만 이상의 도시들이 다수 있으나 집중양상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미국은 자동차 문화에 기반하여 도시의 활발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Freiburg)와 같은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은 기존의 콤팩트한 도시형태가 유지. 아시아 도시들은 상당히 높은 밀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들의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의 주요 특성들에는 높은 밀도, 연속적인 개발, 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 시스템 연계, 도시 확장의 방지 등이 있음
 - 다만, 단편적인 고밀도가 아닌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이 중요하고 규제 정비 및 토지사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적절한 토지가격 관리, 개발을 제한하기보다는 연속적인 개발 유도, 교통과 토지이용과의 연계, 저렴한 주택공급 등이 중요
- ② 콤팩트 시티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미국 HUD의 Ana Marie Argilagos)
 - 미국 HUD는 국가의 주택시장 안정 거주민 보호, 적절한 수준의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주택의 역할을 확대하고, 차별이 없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방면의 연구, 네트워킹, 협업

등을 진행중

- 주요 연구사항으로는 도쿄, 아델라이드(Adelaide), 텐진, 서울 등에서의 같이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용도 개발. 홍콩, 텐진 등과 같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 아델라이드, 요코하마, 도쿄 등과 같이 자전거 사용 촉진 등에 관한 내용임

4. 다양한 도시상황에서의 콤팩트 시티 정책 도구 (워크샵 1)

- ① OECD 콤팩트 시티 보고서의 주요 결과
 - 콤팩트 시티 정책이 여러 국가에서 점차 주요한 도시정책 사항이 되고 있음(한국의 국토종합계획, 일본의 저탄소 녹색도시 가이드라인 등 사례로 들)
 - 압축적 도시개발에 있어서 입지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제도의 필요성 및 도시와 농촌간의 연계 강화를 지적
 - 또한, 기존 도시지역의 재정비(노후산업단지/이전적지 개발, 주거지 재생, 도시지역의 TOD 개발) 및 도시자산의 강화(Intensification) 촉진
 - 콤팩트 시티 조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필요 (교통혼잡 완화, 저렴한 주택의 제공 등)
 - 결론적으로, 모든 도시에 단일한 모델이 적용될 수는 없으며, 모범사례란 지역의 환경과 정책 대응간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키지 정책 접근이 필요함. 정책들이 상호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도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 ② 암스테르담의 콤팩트 시티로서의 강점 ; 시민들과 방문객이 좋아하는 이용하기 편한 녹색교통(자전거, 운하)

- ③ 프랑스: 압축적(compact)이고 다중심적(multi-centric)인 일드프랑스지역 종합계획
 - 2030년까지 연간 6만개의 주택공급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계획프로젝트 전략으로 서 다중심적 콤팩트 시티를 추구하며, 직업, 주거의 개발과 균형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④ 파리의 건축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
 - 파리를 뛰어난 건축유산을 보유한 콤팩트 시티
 - 그러나, 파리 건물의 40%는 1800-1914년 사이에, 80%는 1975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대부분의 빌딩은 매우 노후하여 리노베이션 필요. 또한 1945-75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은 그 이전의 건축물보다 오히려 낮음
 - 파리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목표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5% 감축하는 것. 따라서 이러한 건축유산을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정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
 - 파리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 파리 지역의 10%가 현재 리노베이션 중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4,500개의 사회주택이 재정비되어야 하며, 2050년까지는 개인주택들도 재정비되어야 함
 - 따라서, 노후건축의 지속가능한 재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테라스 및 지붕녹화, 창문, 순환,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고려해야함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파리 노후빌딩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 재정비 전략 등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
- ⑤ 도시를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와 탄소 절약적으로 만들 것인가?
 - UNECE(유럽경제협력위원회), 주택 및 토지이용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소개

-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압축적인 도시공간구조와 기후변화대응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제시(파리, 뉴욕, 덴버의 사례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함을 보임)
- 압축적인 도시공간, 다핵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녹지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통합 등의 원리는 기후변화대응에 적합
- 도시에너지 기반, 주거와 서비스 빌딩, 도시 형태와 저탄소 이동성, 녹지와 물 시스템, 쓰레기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실행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의 책임 및 역할의 분명한 연계와 수평적 수직적 협력이 중요

4. 대도시권 거버넌스 (워크샵 2)

- ① 콤팩트 시티 거버넌스 (OECD의 Adam OSTRY)
 - 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결과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 전형적인 틀은 없음. 프랑스 파리와 일본의 토야마시는 다르며, 당연히 지역에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
 - 서울 대도시권의 송도와 같은 다핵심을 갖는 콤팩트 시티 모델의 의미가 큼
- ②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 (World Bank의 Hiroaki SUZUKI)
 - 대중교통 중심적 개발은 다양한 강점을 가지며, 이와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필요
 -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은 반드시 교통수요관리와 병행되어야 함(자동차이용의 억제와 대중교통이용의 증진)
- ③ 녹색투자정책의 방향 (OECD의 V. Marchal, G. Ang)
 - 저탄소 트렌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그린인프라 계획 사례 소개
 - 그린 인프라란, 온실가스 배출 적고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반시설을 의미. 그

린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장벽을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의 제공 등 정부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 주요정책들로는 시장 유동성 강화 및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 정책 제공, 연구개발정책 강화, 시민역량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정보제공 및 교육 정책 등임

④ 도시모델링을 이용한 정책결정 지원 (한국 국토연구원 김대중 박사)

- 압축도시정책은 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개발 등 다양하나,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현실세계에 비교확인하기는 불가능
- 도시모형은 다양한 압축도시정책의 효과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실험해 보고, 그 결과를 정책가와 시민이 공유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음
- 특히, 공간자료를 활용한 모델링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전문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
- 압축도시정책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통행거리변화, 집적경제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모형 필요
- 모형은 현실세계의 메커니즘을 컴퓨터에서 가상적으로 실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설계가 매우 중요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다양성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형설계시 충분히 고려해야 함



⑤ 영국과 베이징 사례를 바탕으로 urban microcirculation model을 사용한 density trap 가설 검증 (캠브리지 대학의 Ying JIN)

- 압축도시의 최적모형은 밀도와 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도시모형 접근이 필요
- 한국 대표: 한국정부의 향후 OECD와의 협력연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6월에 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컴팩트 시티 정책 세미나에 회원국의 관심을 당부함



6. KRIHS - OECD 연구협력 회의 주요 내용(6.15.)

- OECD의 컴팩트시티 정책과 모델링의 필요성
 - OECD에서 제시한 컴팩트시티 정책은 규제에서부터 개발방식까지 다양함
 - 토지이용규제, 고밀개발, 대중교통중심, 도심지 버려진 토지의 재개발, 직주근접 등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도시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정책의 조합이 다름

- 또한 실제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따라서 컴팩시티 정책을 실제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파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파급효과 모델링 연구가 필요함

□ 분석해야 할 파급효과

- 컴팩시티 정책을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토지이용변화 등 다양함
 - 토지이용이 보다 컴팩트하게 변할 것임
 -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것임
 - 시민들의 이동거리가 줄어들 것임
 - 이동거리가 줄어들면서 오는 피로감 감소로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집적경제 효과 증가
- 파급효과간 상호작용 고려 필요
 - 토지이용패턴은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이동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효과가 상호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석방법론

- 나라마다 또는 도시마다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모형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작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설계

해야 함

- 무엇보다 컴팩시티 정책이 파급효과에 미치는 매커니즘을 정리하고, 이를 모델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

□ 향후 OECD project 계획(안)

- 컴팩시티의 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통합모형 개발 연구 계약 예정
 - 발주처: OECD
 - 기간: 2012년 7월 31 ~ 2012년 12월 20일
 - 금액: 2만 유로